

Korean Tax Update

September 2017, Issue 39

[조세뉴스]

국세청,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·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[보도자료]

올해 10 월은 임시공휴일·개천절·추석·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(9.30.~10.9.)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어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·납부 및 발급·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함.

- 국세기본법 제 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근거
-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.10.(화)에서 10.13.(금)까지 3 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.
 - ① 원천세 신고·납부
 - ② 증권거래세 신고·납부
 - ③ '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' 원천공제 신고·납부
 - ④ 인지세 납부(후납 승인 분)
 -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
- 9 월분 전자(세금)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.10.(화)에서 10.13.(금)까지, 전송기한은 당초 10.11.(수)에서 10.16.(월)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.

행정안전부,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[보도자료]

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임시공휴일(2 일), 추석 연휴(3 일~5 일), 대체공휴일(6 일)로 인해 10 월 1일부터 9 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,

- 9 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,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0 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 일로 연장함.
- 참고로 9 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(주택분, 토지분), 담배소비세는 토요일(9 월 30 일) 및 임시공휴일 지정(10 월 2 일)에 따라 10 일이 납부기한이 됨.

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[전문보기]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.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10 월 23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.

(1) 개정이유

- M&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 2 제2항 제4호). 그러나 그 기간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. 이로 인해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&A시 부담으로 작용함. 이에,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을 확대하여 대·중소기업간 M&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(2) 주요내용 :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인정기간 확대(안 제 3 조 제 1 항, 안 제 9 조 제 1 호)

-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

국세청,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[보도자료]

(조사 배경) 서울 강남 4 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,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.

(조사 착수) 국세청은 9. 27.(수)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·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.

-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·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,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 명임.
-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하였음.

(조사 방법)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 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·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.

-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*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·고발조치할 예정임.

*부동산실명법 제 5 조(과징금),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28 조(과태료), 조세범처벌법제 3 조(조세포탈) 등

[예규·판례]

[판례 1] 대표이사의 보수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임

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 두 60884 판결

-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임. 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 26 조,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,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(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)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,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,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, 정기적·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,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,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,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,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.

[판례 2]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합병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8 호 및 제 4 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

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 두 36588 판결

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4 항은 '제 3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'고 규정하고 있음. 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서 법인세법 제 44 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. 그러므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4 항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,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.

**[심판례 1]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
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 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은
추징대상이 타당함**

조심 2017 지 0704, 2017. 9. 8

-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, 비록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,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2 년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임.

**[심판례 2]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총당하는 이자는 당해
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임**

조심 2015 지 1945, 2017. 9. 8

-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총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,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총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움.

**[심판례 3]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
경우에도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**

조심 2017 광 2955, 2017. 8. 31

- 조특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단서 및 제 2 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위 단서는 제 2 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,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 1 항 제 3 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움.

[심판례 4] 금융·보험업자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

조심 2017 서 2375, 2017. 8. 24

- 파생상품 등의 평가이익이 「교육세법」상 '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'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점, 기획재정부 예규(소득세제과-216, 2014.3.31.)에 의하면 금융·보험업자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76 조 제 1 항 제 2 호에 근거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중 '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'에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타영업수익임.

[심판례 5] 청구법인이 임대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 조 제 2 항의 취득세 추정사유인 매각·증여에 해당하지 않음

조심 2017 지 0182, 2017. 8. 23

- 「신탁법」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·수익·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.

[심판례 6]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고 남은 잔여사업장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임

조심 2017 지 0216, 2017. 8. 21

-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,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, 쟁점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 공실 상태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하는 임대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면적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여야 함.

[예규 1]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,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'산업용 건축물 등'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

지방세특례제도-797, 2017. 9. 19

- 지식산업에 속하는 연구개발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함께 동일기업 내에 다른 사업체에서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

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,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'산업용 건축물 등'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.

[예규 2] “법인전체 근무인원”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”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

재조특-699, 2017. 9. 12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62 조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법인전체 근무인원”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”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.

[예규 3]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

법인,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3028, 2017. 9. 1

-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「법인세법」 제 119 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,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120 조 제 5 항 단서에 의해 「법인세법」 제 76 조 제 6 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.

[예규 4]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 3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,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

재부가-447, 2017. 9. 1

- ①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 3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,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. ②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. 다만,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7. 5. 18. 선고, 2012 두 22485)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. ③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.

[예규 5]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·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재부가-441, 2017. 8. 31

- ①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·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5 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) 또는 고혈압·당뇨병등록교육센터(「지역보건법」제 11 조·제 30 조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 41 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)를 운영하고,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(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·도비 등)는「부가가치세법」 제 29 조 제 5 항 제 4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. ②「의료법」제 33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(「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3 조제 5 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)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,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 26 조 제 1 항 제 1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 조 제 1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 ③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5 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·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, 고혈압·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
[예규 6]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§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

서면법령재산-1362, 2017. 8. 28

-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 48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.

[예규 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]

서면법령재산-6158, 2017. 8. 22

- 신설법인의 주주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주가 「소득세법」(2016.12.20. 법률 제 143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 94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(2016.12.5. 대통령령 제 276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 157 조 제 4 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임.

[예규 8]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 45 조의 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]

재조세법령운용-765, 2017. 7. 13

- ①해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'15 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 제 56 조 제 2 항 제 2 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, 선박 등 해운 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104 조의 10 제 1 항 제 1 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「법인세법」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가목에 따른 투자로 차감하기 위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 45 조의 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「법인세법」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. ②내국법인이 '15 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「법인세법」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, 「국세기본법」 제 45 조의 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「법인세법」 제 56 조제 2 항제 2 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.

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,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KPMG 삼정회계법인

Tax Center of Excellence

kr-fmtaxtcoe@kr.kpmg.com